

소상공인 위한 홍남기의 약속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 이틀연속 경제현장 행보
“소상공인정책 사각지대 없어질 것”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가시켜 관련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정책실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인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의견도 보다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엔 경제 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투자, 노동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이날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으로 다뤄져왔다면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

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날도 홍 부총리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총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앞줄 왼쪽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관련 현안이 소홀히 취급돼 왔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하고 소상공인들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의 폭도 넓혀나간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분야를 임기응변식 지원대상으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연합회

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대변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과정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자위 계류법안 700건... 갈길 먼 국회

중기 관련 85건, 벤처 관련 11건
2020년 21대 국회때 ‘자동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경내행사에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갈 길은 여전히 먼 실정이다.

17일 본지의 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7건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85건, 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산자위의 가장 해묵은 법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향토기업이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보·인력 수급 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토기업을 중소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제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창



지난 14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업 후 폐업·파산한 사람이 취직하려는 경우 창업 사실이나 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6년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중기부 장관 권한으로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이후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대표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 이름으로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자, 질권자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떠돌고 있다.

산자위를 해매고 있는 700건 넘는 법안은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못 가는 이유는 ‘중복’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법안 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급한 현안 등 충분히 필요한 법안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

신선농산물 수출 12.8억 달러 ‘역대최고’

농식품부, 전년비 16.6%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2017년보다 16.6% 증가한 12억 8000만 달러(약 1조 43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 전체 수출 역시 전년보

다 1억 달러 늘어난 69억 3000만 달러(약 7조 7740억원)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선농산물 중 배 수출은 베트남·미국 시장 수출에 힘입어 21.3%나 성장해 처음으로 8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포도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 61.3% 증가한 1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딸기 4800만 달러(9.2% 상승), 토마토 1680만 달러(20.5% 상승), 인

삼류 1억 8770만 달러(18.5% 상승) 등 주요 품목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껌(당배) 수출액이 크게 줄었지만, 라면·음료·조제분유 등 다른 주요 품목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고, 음료와 조제분유는 각각 20.6%, 27.6% 수출이 증가했다. 껌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담배 죄악세 100%를 부과하면서 수출액이 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기업호감지수 ‘53.9점’... 전년비 소폭 하락

대한상의, 2018 CFI 조사 결과

국민들은 기업을 여전히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53.9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CFI는 50점을 넘으면 중립적이라는 의미다. 75점 이상은 긍정적, 50점 미만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국내 CFI는 2016년 47.6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중립적 평가는 유지됐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제 발전 기여(42.4%)였다. 일자리 창출(36.9%), 국가 브랜드 향상(12.5%)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평가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4.4%)에서 많이 나왔다. 후진적 기업문화(20.5%), 일자리 창출 부족(19.0%), 사회공헌 활동 미흡(7.8%), 국가 경제 기여 미진(5.9%) 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9점으로 부정적이었다. 전년보다 3.2점이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기대에 못미쳤고, 일부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도 전년보다 1점 떨어져 58.4점을 받았다.

부분별로는 사회적 공헌(46.9점)과 규범·윤리 준수(44.2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기업의 경제적 기여 점수는 62.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년보다는 2.5점 떨어졌다.

/김재홍 기자 juk@

〈채당금 제도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일반채당금	지원한도	1,800만원	2,100만원
소액채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 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노동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한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규모가 큰 편이다.

정부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채당금 지급 ▲소액채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채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채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기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채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채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채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